■ 홍준표 대표 지명직 최고 호남배제 반발 확산

"대표가 국민통합 포기…" 실망 넘어 분노

정용화 광주전남 발전특위·호남 당협위원장·남경필 최고 등 잇단 직격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 호남출신을 배제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전남 지역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의 발언은 우리 정치발전에도 한나라당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홍 대표 본인의 정치적 비전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 소통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의 대표가 특정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통과 통합을 향해 가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호남에서는 이전의 득표율보다 3~4배 더 많은 지지를 얻는 등 최근 호남에서 지지율을 꾸준히 높여왔고, 호남인들도 한나라당과 소통하려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호남인들의 변화노력을 적극 끌어안아 전국정당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고위원 호남배제론은 소통과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홍 대표가 한나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한 역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8일자 광주일보 기사를 소개하면서 "1면에는 '한나라당 노골적 호남포기'란 제목으로, 3면에는 '호남인 모욕주는 말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이게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의원도 이날 "호남 지역에서 죽을 둥 살 둥 뛰어다니는 입장에서 사실상 호남 포기 발언은 충격이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호남 포기'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10여명도 1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이번 최고위원 호남 배제 논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홍 대표의 호남인사 배제 및 소외 정책에 대한 호남지역 당협위원장의 입장 전달과 함께 1년여 넘게 사고 지구당으로 방치하고 있는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경필 최고위원도 같은 날 호남을 방문, 특강과 광주시의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홍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안의 부적절성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최고위원은 "당의 큰 방향이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였고, 그런 큰 방향은 역사성을 가져온 것인데 대표가 당의 총의 없이 이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 등 광주시 간부직원들이 지난 31일 오전 시청사 앞에서 수해 피해가 가장 심한 경기도 포천시에 보내는 긴급구호물품 생수 1만병(18t)을 실은 구호차량을 배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빛고을수' 18만t 수해지역에 전달

군장병·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여 복구 총력

최근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울시, 경기도 등 수해지역에는 지난 31일 궂은 날씨에도 공무원과 군 장병,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이 대거 참여해 복구에 총력을 쏟았다.

또 각 정당 정치인, 민간기업체·공기업 등의 직원들도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으며, 기업들의 수재의연금 기탁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군은 이날도 서울에 장병 2500여 명과 장비 170여 대를 투입하는 등 전국 25개 지역에 장병 1만3800여 명과 장비 530여 대를 지원, 지난달 27일부터 모두 10만2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경기경찰청도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경찰관, 전의경 기동부대 등 3800여명(연인원 1만1000여명)을 투입해 복구를 도왔으며, 소방당국과 자원봉사자들도 매일 수천 명씩 침수피해를 입은 시·군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우로 큰 피해를 당한 9개 시·군의 응급복구가 지난 31일 오전 현재 40~70%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 수해지역에 빛여울수 1만병(18만t) 등 긴급구호물품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중·북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총괄반과 예산지원반, 구호물품 지원반 등을 편성하고 이날 피해가 심각한 경기도 포천시에 생수를 긴급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포천지역을 방문, 구호품을 전달하고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복구단에게 과일과 간식, 생수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저축은 비리' 국조특위 막판 쟁점은

'피해자 전액 보상' 타협점 주목

의혹 폭로전, 증인채택 평행선

전체 46일의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지난달 31일로 12일을 남겨놓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주 총리실·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당국·대검찰청 등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지난주 문서검증에서 대상 기관의 자료제공 거부로 진통을 겪었던 터라 구체적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구제책, 저축은행 비리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증인 채택 등 주요 쟁점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해자 구제책**=지난주 저축은행 현장방문을 계기로 여야는 피해자 대책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자들은 후순위채 투자자와 예금보장 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주를 구분없이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특위 위원들은 전액 보전을 공언했다. 하지만, 보전 방법을 놓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런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며 예금자보호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달 12일까지 손해배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비리 의혹**=여야의 저축은행 비리 폭로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4조600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편법·불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캄코시티·전남 신안프로젝트·인천 효성지구·시흥 영각사 납골당·영남 알프스골프장 사업을 놓고 전 정권과의 연루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PF 대출이 주로 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맞불 전략'을 펴고 있다.

◇**증인 채택**=증인채택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지난달 21일 국조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때에도 증인 채택 안건만은 추가 협의할 과제로 남겨뒀다.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 60여 명도 사흘간 청문회에서 심문하기 벅차지 않으냐고 반문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목하는 핵심 증인은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렇게 되지 말란법도 없는거고…

'독도' 한·일 외교갈등 고조

日 의원 입국불허에 항의 할 듯

韓 '독도 일본땅 백서' 용납못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일본 자민당 의원의 입국 계획과 관련,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방침에도 불구, 일본 의원이 애초 계획대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입국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조만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포함한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전망돼 현해탄에 조성된 긴장의 파고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일본 의원의 입국은 기존 방침대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31일 "일본 의원이 이번 방문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원들이 공언한 대로 1일 김포공항에 와도 '입국거부'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인 이들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의 입국 거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기의 독도 비행과 관련, 이달 초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이란 추가 조치를 뒤늦게 내린 것도 자민당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에 일본 외무성이 항의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날 "일본 의원들이 물러갈 때까지 있겠다"면서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독도를 방문한 것에 이어 국회 독도특위도 오는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일본 측에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한일 간 외교갈등에서 일본 방위백서 문제가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이달 초 발간 예정인 방위백서에는 올해도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기술이 예년 수준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